

# 국내 은행의 對북한 진출 방안

김관태 / 조흥은행 경제연구소 주임연구원

## 머리말

**T**동서독간 다양한 형태의 경제 교류 협력이 양독간의 전반적인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경제 통합에까지 이르게 한 것처럼, 남북한간의 경제 교류 협력도 상호 신뢰 구축과 민족 동질성 회복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에는 남북한 경제 교류 협력이 단순 물자 교역 중심에서 생산 부문의 경제 협력 단계로 발전하고 있고, 금강산 관광에 따른 안적 교류가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남북한간 직접적인 화폐 교환 등을 비롯한 금융 분야에서의 남북한간 교류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은행으로서는 대북 진출 문제가 시급한 현안은 아니라 할지라도, 향후 남북한 경제 교류와 경제 협력 활성화에 대비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상품 개발이 필요하고 통일 관련 제반 사업에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며, 장기적으로는 남북 통일 과정 및 그 이후

와도 관련하여 북한 금융 기관과의 교류 및 유대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정보의 부족과 접촉 상의 어려움 및 관련 법규의 미비 등으로民間 금융 기관의 북한 진출은 커다란 제약 조건 하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정부가 남북한 직교역의 확립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개별 은행들의 북한 진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주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sup>1)</sup>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북투자제도 및 관행이 미비된 상태에서 은행의 북한 진출은 투자 위험과 회수 가능성을 감안하여 다소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진출 유형과 특징

국내 은행들이 북한에 진출할 때의 유형으로는 독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단독 진출, 북한 은행과의 합작, 기존 북한 은행

1) 정부는 남북한 직교역의 확립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북협력기금을 이용한 금융 기관의 순실 보조, 금융 기관의 융자, 미결제 채권 인수 등에 있어 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을 인수하는 방법 등 여러 형태가 있을 것이나 각각은 그 특색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단독 진출은 북한에 새로이 진출하여 지점이나 사무소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남한의 우수 금융 기술과 인력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영업망을 구축할 수 있으며, 기존 북한 은행이 가지고 있는 부실채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새로운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생기는 현지 적응 문제와 영업망의 확산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기존의 북한 은행을 매수하거나 지분 참여를 하는 방법은 단독 진출에 비해 까다로운 설립 절차를 갖추지 않아도 되고 북한 금융 시장에 진출하기도 수월하지만 마찬가지로 현지 적응에 있어 경영권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기존 북한 은행원들과의 마찰이 있을 소지도 있다. <표 1>은 대표적인 진출 형태별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외에도 기존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과 합작하여 기술·인력·자본에의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는 방법이 있다.<sup>2)</sup>

이러한 진출 유형을 고려해 북한 지역에의 진출은 세심한 분석을 기초로 지역별 특성에 따른 지점 설립 및 경영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의 진출이어야 하는데, 현재 북한에서 1인당 GDP가 높은 도시들은 평양, 개성, 남포, 청진 등이므로, 이들 지역을 진출 유망 지역으로 참고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의 대외 개방이 중국과의 국경지대(도문시, 단동시 등)의 변경 무역 중심으로 전개될 경우, 우리

<표 1> 대북 진출 형태별 특징

유형	내용	장점	단점
단독 진출	모은행의 지점 또는 사무소 설립	북한내 소수 주주와의 마찰을 회피할 수 있음	업무 범위 및 설립 자격과 절차 등의 영업 승인 절차가 까다로움
현지 은행과 합작 또는 출자	지분 참여(출자), 합작 설립	단독 진출보다 영업망 확충에 유리	경영권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음
북한 상업은행의 인수	매매를 통한 인수	인적 자원, 교육 및 금융 서비스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 발생	부실채권 인수에 따른 사후 처리 비용 수반

2) 직접적인 북한 진출은 현재의 영업 여건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경제 협력의 진전에 따라 합영 은행을 진입하는 방안과 독자적인 점포망을 갖는 방안 등이 있다. 특히, 구 동서독 경제 통합에 있어 구서독 은행들의 구동독 진출 형태에 대한 연구가 유용할 것이다.

나라 기업 및 금융 기관의 대북한 진출 우회 기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진출 분야에 있어서는 상업·설비·종합 금융의 구분 진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상업 금융은 수익성에 기초해 도소매업이 발달한 지역, 한국 기업 집중 진출 지역, 경제 발전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진출해야 하며, 설비 및 종합 금융은 보다 장기적인 수익성 관점에서 국제 금융 중심 지역이나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진출해야 할 것이다.

남북 관계에 있어 단기적인 수익성 위주 전략은 실현 불가능할 것이므로, 설부른 고지 선점형 전략보다는 시장성이 확보될 수 있는 단계에서 적시 진출을 하여야 한다. 남북 교류에 있어 정부의 창구 단일화 원칙과 북한의 남한 공식 창구에 대한 거부감이 초래하는 갈등적 상황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은행은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첫째, 북한 진출 은행들은 기업에 대해 자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원리금 상환 조건을 부과하여 자금을 공급하는 한편, 은행의 자금 동원력을 확대하여야 하므로 금융 상품을 다양화하고 북한 지역 주민들의 저축 증대를 위하여 예금 금리를 인상하여야 한다. 또한 새로운 은행대출채권의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장기적으로 북한의 상업은행은 국가 예산과는 별도로 예금이나 차입을 통하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도록 해야 하며, 이윤과 손실에 대한 독자적인 책임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증권 및 보험 업무 등을 포함한 모든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종합적인 금융 기관의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995년 1월에 네덜란드의 은행과 다국적 보험 기업인 ING社와 조선국제보험회사간에 'ING North East Asia Bank'라는 합작 은행을 70 : 30의 비율로 설립하여 평양에 지점을 개설하였다. ING社는 향후 다국적 기업들의 대규모 북한 투자를 예상하고 북한의 금융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공격적 마케팅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국내 은행들의 대북한 진출 시 기본적으로는 시장 경제 원리에 따른 수익성 목표의 달성을 상당히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획되어야 한다. 특히, 북한 금융 시장은 규모의 경제에 이를 정도의 판매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무리한 외형의 추구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북한 금융 시장 진출의 의의를 통일에 대비한 거점 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 구동독 지역을 모체로 했던 Dresdner Bank는 통일 전부터 구동독 금융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였고, 통일 직

후 구동독 Kreditbank와 합작, Dresdner Bank-Kreditbank AG를 설립하여 공격적 마케팅 전략으로 구동독 금융 시장을 주도한 선례가 있다. 그 결과, Dresdner Bank는 통일 후 업무 영역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위상이 강화되었다.

독일의 사례를 미루어볼 때, 국내 은행의 경우에 있어서도 북한내 국내 지점의 설치, 북한 은행과의 업무 제휴·협정 등 긴밀한 관계 유지 등은 통일 이후 북한 금융 시장 선점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경제 통합 이전의 대북 진출 방안

기업과 마찬가지로 은행의 대북 진출<sup>3)</sup>은 상당한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다. 특히, 북한이라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특수한 집단의 특성 및 통일 이후를 고려하지 않은 진출 전략은, 은행으로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행 착오를 일으키기 쉬울 것이므로 최적의 진출 및 영업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1994년 북미 핵협상의 타결과 남한 정부의 '남북 경협 활성화 조치'로 남한 기업들의

대북 진출이 활발하게 추진되자 각 은행들도 이에 대비해 종합기획부, 국제부 등을 중심으로 한 북한전담팀의 구성을 통해 북한 진출을 모색하였다.<sup>4)</sup> 그러나 1996년 강릉 지역의 잠수함 사건 등을 비롯한 일련의 남북한 긴장 관계의 지속과 1997년 말의 IMF시대의 도래로 은행의 대북한 진출은 별 관심을 받지 못해 현재까지도 남북한 금융 협력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은행의 북한 진출은 국제 금융 시장의 미개척지인 북한 금융 시장 진출의 교두보 확보이자 초기 영업 활동을 통한 시장 선점이라는 측면에서, 북한금융제도의 개편을 촉진시켜 향후 남북 경제 통합시 통일 비용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남북 경협이 활성화되기 이전이라도 적극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격적인 경제 통합기 전에 은행이 북한에 진출하는 것은 몇가지 이점이 있다.

첫째, 남북한 교류 업자들은 반출입에 따른 결제를 제3국 은행을 거치지 않고 송금하거나 받을 수 있어, 시간이 단축되고 업무 진행이 효율적일 수 있다. 둘째, 북한 투자 은행은 북한에 투자하려는 기업체를 유치할

3) 북한의 「외국투자은행법」과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에 관한 규정」에는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외국투자은행 및 상주대표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국내 은행들의 북한 진출도 가능하다.

4) 당시 각 은행의 북한전담팀은 대북 관련 자료 수집, 남북 관계 관련 법규 및 제도 연구, 대북 진출 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지원 방안 모색, 은행의 단계별 북한 진출 방안 수립 등의 업무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수 있다. 또한 향후 북한 사회가 개방되어 물적·안적 교류가 확대되고 기업의 투자 환경이 자유로워지면 유리한 선점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세째, 북한은 선진 금융 기법을 전수받을 수 있으며, 자금의 유입이 많아지므로 경제 건설을 위한 자금 형성이 용이해질 것이다. 넷째, 북한 진출은 장기적으로 해외 금융 시장 진출에 있어 신흥 시장 공략의 일환으로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 홍콩, 베트남, 미얀마, 북한 등 동남아 및 동북아를 연결하는 지역 특화 시도도 고려해볼 만한 것이다.

따라서 완전한 경제 통합 이전이라도 은행의 북한 진출은 필요하다. 특히, 현재와 같이 남북한 관계가 호전되고 국내 기업들의

대북 진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는 국내 은행들의 대북 진출은 필수적이다.<sup>5)</sup> 앞에서 고찰한 대북 진출 유형별 특성을 토대로, 남북한 경제 통합을 고려해 남한의 은행들이 북한에 진출할 때의 바람직한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남북 경험과 연계된 단계적 추진 필요

국내 은행의 북한 진출은 남북 관계와 경제 협력의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남북한이 수용 가능한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sup>6)</sup>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선 은행대표사무소를 설치하고 점차 사무소 설치 지역을 확대해나가며, 우리나라

〈표 2〉 남한 기업의 북한 진출 단계에 따른 은행의 대응 방안

북한 진출 단계	은행의 대응 방안
단순 교역 단계 (위탁 교역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에 이미 진출했거나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기업 또는 북한의 변경 무역에 관계되는 기업의 주 거래 은행화에 노력</li> <li>· 이를 위해서는 대북 진출에 관심 있는 기업을 위해 정보 수집·제공할 수 있는 사무소 설치 필요</li> <li>· 이 경우 북한에 진출한 외국 금융 기관과의 업무 제휴를 통해 관련 기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편의 제공</li> </ul>
소규모 합작 및 단독 투자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진출 기업의 현지 금융 업무를 전담할 소규모의 출장소 또는 지점 설치 필요</li> <li>· 최소 필요 인원으로 특화 업무 개발 필요</li> <li>· 합작 투자에 의한 진출을 통해 현지 적응력 배양 필요</li> </ul>
대규모 합작 및 대형 단독 투자 단계 (인프라 건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액 출자에 의한 자회사 형태의 현지 법인 설립 추진</li> <li>·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중장기 업무를 통해 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주력</li> <li>· 북한 기업에 대한 투자도 검토</li> <li>· 북한의 경제 개혁·개방 정도에 따라 북한 주민을 상대한 리테일 뱅킹으로까지의 업무 확대도 검토</li> </ul>

5) 중국의 경우, 중국 진출 대만 기업에 대한 금융 서비스 제공, 대만 자본의 중국 유치 등을 목적으로 중국내 대만 은행의 사무소·지점 설립 및 합작 은행의 설립을 장려하였다.

기업의 대북 진출 등에 맞추어 자유경제무역지대 등에 우리나라 은행 지점을 설립하고 남북한간 합영 은행이나 외국 은행(남한 은행의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이 바람직 할 것이다.

먼저 남북한 교역의 초기 단계(주로 간접교역 및 위탁 가공 중심)에는 남북한간의 물자 교류에 따른 각종 정보와 편의를 관련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남북 경협 활성화에 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 은행의 사무소가 설치되면 여수신 업무와 결제 업무 등 은행 영업 활동을 영위할 수는 없으나, 북한 은행과의 실무 접촉을 확대할 수 있어 지점이나 합작 은행의 설립없이도 북한 은행과의 금융 거래를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북한 현지에서 북한의 일반 경제와 금융제도 등을 포함한 투자 환경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련 기업 앞으로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의 대북한 진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sup>7)</sup>

그리고 남북 관계의 전전이 이루어지고 북한의 대외 개방이 보다 본격화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의 대북한 진출이 활성화될 것이며, 경제 개방 초기 단계에서의 신규 설비 도입 및 기존 노후 설비의 대체 필요성으로 금융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본격적인 남북한 합작 투자 및 단독 투자 형태의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금융 기관의 북한 지점과 남북한 합영 은행을 설립하여 북한 진출 기업에 대한 설비 투자 자금 및 운영 자금의 지원<sup>8)</sup>과 외국환 결제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북한의 금융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sup>9)</sup> 그러나 남북한간의 합영 은행 설립은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고, 남북한 모두에게 경제적 실리를 안겨줄 수 있으며, 북한 금융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기에 대표사무소나 지점 설치 이전에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의 나진·선봉경제특구 지역에

6) 남북 경협 추진은 북한의 개방 추세에 맞추어 간접 및 직교역, 위탁 가공형 합작, 소규모 합작, 소규모 단독 투자, 인프라 건설 관련 대규모 합작, 대규모 단독 투자의 형태로 단계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 은행들은 이러한 추진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북한 진출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7) 한편, 북한사무소 설치는 향후 금융 기관의 북한 지점 설립 및 합영 은행 설립 등이 이루어질 때, 북한 내에서 투자 절차 및 영업 활동 등에 따른 현지 행정 처리 등의 면에서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8) 북한 진출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남북경협기금의 금융 지원에 관한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9) 이때 은행들은 원자재나 기계, 장비 등 시설재의 반출입에 따른 리스 자회사의 이용 등 최소 필요 인원으로 특화 업무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서의 개발 계획에 우리나라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경우에는, 이 지역의 항만, 철도, 도로, 항공, 통신, 전력, 급수, 서비스 및 관광공업단지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과 관련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공동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남북 경협이 활성화되어 우리나라 기업을 위한 한국전용공단 추진과 북한 주재 사무소 설치가 본격화되는 단계에서는 전액 출자에 의한 자회사 형태의 현지 법인의 설립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남북한간의 경제 협력 진전에 따른 인적·물적 교류의 증가 및 우리 기업의 북한 투자 및 진출에 대비하여 은행의 단계별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 다자간 국제 협력을 통한 진출 필요

대북 투자의 문제점은 정치적 여건의 변동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경제 거래를 보장할 수 있는 안전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치적 여건에 따라 언제라도

해소될 수 있는 관계라면 투자 위험도가 지나치게 높다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속적인 경제 관계 유지를 위해 제3국이 참여하면서 남북한 공동의 이해 관계가 연계된 장기적인 협력 사업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경우로 사업은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 경제 협력을 위한 홀륭한 안전 장치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간의 경제 협력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도록 경수로 건설 사업은 국제적인 보장 하에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전과 같이 남북한간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대화의 통로가 폐쇄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sup>10)</sup>

북한과 KEDO는 1997년 7월 2일 경수로 부지 공사 관련 제3차 실무 협상에서 외국은행 출장소의 설립·운영에 합의한 바 있다.<sup>11)</sup> 이에 따라 외환은행은 25만 달러의 비용을 들여 작년 12월 12일 남북 분단 최초로 북한 함경남도 신포지구 경수로 부지에 직원 3 명의 '금호출장소'를 개설하였다.

이 출장소는 미국·일본의 KEDO 대표와

10) 다자간 국제 협력을 통한 사업 참여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 기업들도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대북 투자에 참여할 수 있다. 둘째, 국제 사회의 공조를 통하여 북한의 예기치 못한 돌발 행동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이 아직도 남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거부감을 회식시킬 수 있다. 넷째, 일본 등이 수교 자금을 통하여 대북 투자를 주도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다. 물론 공동 사업에서 오는 비효율은 피할 수 없겠으나 경영 참여를 적절히 구분할 경우 비효율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박진·임원혁·이유수(1998. 6), 「전환기의 대북 정책과 남북 경협」, 한국개발연구원, p. 149 참조).

11) 단, KEDO 공사 지역 내의 외국 은행 출장소에 대해서는 북한의 은행 관련 법령 적용이 배제되며, 이 출장소는 공사 착공 14 개월 경과후 또는 부지 완공증 선도래 시점에 자동적으로 지점으로 승격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합의를 하였다.

남한측 근로자들의 송금 및 입출금 업무와 남한측 참여업체와 북한측 사업자간의 결제 업무를 맡고 있으며, 1998년 5월말 현재 실적은 예금 113 건·8만 5,000 달러, 송금 139 건·45만 달러 등이다. 올 10월 이후 경수로 본공사가 시작되면 5월말 현재 100 명 안팎인 체류자는 최대 5,000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이 출장소는 지점으로 승격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맞춰 취급 업무도 단순 환전 및 입출금에서 외환 수출입이나 대출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향후 남북 경협 확대에 대비해 북한내 금융 거점으로 육성시킬 것이라고 한다.

경수로 건설 사업과 연관한 통신 및 사회간접자본 분야에서도 남북한의 경제 협력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으며, 경제 협력의 분야나 참여 기업을 위한 저변 확대가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수로 건설 사업을 통해 이러한 장기적인 프로젝트의 효용이 입증되어지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질 가능성 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두만강유역개발사업(TRADP)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은 현재로서는 경수로 사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유일한 다자간 경제 협력 방식이다. 따라서 두만강유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

추진 중인 '동북아개발은행', '두만강은행', '두만강지역개발금융(TRDF)' 등 다자간 경제 협력에 관심을 가지고 은행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 소규모의 시범적 진출 필요

남한 기업의 북한 진출이 본격화되기 이전이라도 나진·선봉 등의 지역에 남한 은행의 사무소 설치부터 추진할 필요가 있다.<sup>12)</sup> 사무소 차원에서는 직접적인 은행 서비스 제공은 불가능하나 향후 정상적인 은행 영업 활동에 필요한 정보 입수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사무소 설치는 향후 지점 혹은 합영 은행 등의 설립시 투자 절차, 현지 행정 비용 등의 절감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은행 출장소나 은행 지점의 진출은 우선적으로 설립이 용이한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와 대북 경수로 지원 사업과 같은 공동 프로젝트가 예정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고, 점차 대북 정보 수집이 용이하고 북한 금융 기관과의 업무 협력이 가능한 평양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에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금

12) 현 단계에서 북한에 금융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수요도 극히 저조하여 투자 진출은 시기 상조이다. 현재로서는 사무소 형태로 영업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이상의 활동을 기대하기에는 무리이다.

강산 관광 개발 사업은 남북한의 정부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sup>13)</sup> 따라서 은행은 이 지역에 대한 진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간 300만 명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모두 200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북한의 「금강산 관광개발계획서」에 따르면, 북한은 금강산 주변에 국제 공항과 특급 호텔 등을 건설하고 금강산 일대 약 13억여 평을 자유무역지대로 조성한다고 한다.<sup>14)</sup>

이러한 개발이 예정된 금강산자유무역지대에 은행이 진출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기대된다. 당장 금강산신드롬이 예상되고 있는 4박 5일의 금강산 유람선 관광의 경우 (1998년 11월 18일부터 출항 개시) 주관 추진 기업인 현대의 산출에 따르면, 연간 36만 명에 7,000억 원(대략 5억 달러)의 여행 경비가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이때문에 은행, 보험사, 투신사, 신용금고 등의 각 금

융 기관들이 금강산 관광 상품을 개발 완료해 「금강산 特需」에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sup>15)</sup>

### 단독 진출보다는 합작 진출이 바람직

경제 통합기 이전에 남한 은행이 북한에 진출할 때는 구조가 다른 체제에의 진출이라는 특성상 단독 진출보다는 북한이나 외국계 은행과 합작하는 것이 좋다. 특히, 북한금융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초기 단계에서는 위험도가 큰 외국 은행보다는 설립 및 운영이 용이하고 업무 지역 제한이 없는 합영 은행을 설립하는 편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sup>16)</sup> 합작 진출은 단독 진출에 비해 영업망의 확충에 유리하고, 위험이 분산되며 북한 당국과의 마찰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합작 은행의 영업과 투자를 통하여 남한 은행들은 북한 인력을 고용하고 교육하는 동시

- 13) 남한 정부는 북한 잠수정 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정리, 정경 분리의 원칙을 바탕으로 현대측이 북한과 합의한 금강산 관광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북한 정부도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과의 금강산 관광 사업 계약 체결을 계기로, 그간 경제난과 외자 유치 어려움 등으로 보류해왔던 관광 개발 사업에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다.
- 14) 이 자유무역지대에 투자하는 남한 기업을 포함한 외국 기업들에 대해 북한측은 ① 관세 면제, ② 금융 기관 설립 허용, ③ 수출입 허가 면제 등 각종 특혜를 준다는 계획이다. 또 이 지역의 외국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최고 70년간 토지이용권을 부여, 이윤 발생 첫해부터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하고 6년째부터 10년째까지는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담고 있다.(「경향신문」(1998. 6.24)).
- 15) 4박 5일간의 금강산 유람선 관광시 1인당 보험료는 현 여행자 보험 수준인 7,000 원 내외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은행의 경우, 금강산 여행에 따른 보험의 혜택이 가능한 제휴 상품을 개발해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 16) 국내 금융계에서는 최근 홍콩 페레그린투자회사가 파산하여 북한의 합작 은행인 페레그린-대성은행의 나진·선봉지역으로의 진출이 무산되자, 이 은행의 페레그린 지분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인수해 북한으로 진출하는 방안이 거론된 바 있다.

예, 북한 금융 시장의 잠재력을 연구하는 등 관리적·영업적 측면에서의 경험을 축적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합작 은행 방식의 북한 진출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민회의도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다. 강인덕 통일부 장관과 남궁진 국민회의 제1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지난 4월 10일의 당정협의에서 “북한과 합작 은행을 설립, 운영 중인 제3국 기업의 지분을 국내 금융 회사가 인수하는 방식의 실질적인 남북 은행 합작을 전향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남북 금융 교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었다.<sup>17)</sup>

#### 환거래 계약 체결은 신중하게 결정

최근까지 국내 기업들의 대북 투자가 몇몇 대기업의 종합상사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임가공 사업에 머무르고 있어, 남북 경협이 본격화되기 이전에는 국내 은행들의 본격적

인 대북 진출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향후 본격적인 남북 관계에 대비한 선점 효과와 시장 조사를 위한 현지사무소 설립을 모색하는 차원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간접 교역 중심의 남북 교류 단계에 있어서는 북한 금융 기관과의 환거래 계약 체결이 가장 유효한 진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환거래 계약 체결은 국내 기업의 대북한 반출입 지원과 은행의 북한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북한 은행의 경우 경화 자산 부족과 사회주의적금융체계의 특성, 낮은 해외 신인도 등을 고려할 때, 남북한 은행간 정상적인 환거래는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으로 북한 은행은 파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환거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은행은 거의 없으며 지금 보증이나 지금 확인도 신뢰할 수 없다.<sup>18)</sup> 현재와 같은 북한의 열악한 금융체계 하에서는 북한 은행이 발행한

17) 남북한 합작 은행 설립 등 남북간 금융 교류가 이뤄지면 북한의 나진·선동과 진남포, 사리원 등에 현지 공장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외국환 업무와 지본 투자 등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18) 북한은 경제난 타개를 위한 외자 유치 목적으로 중앙은행, 무역은행, 고려은행 등의 명의로 1994년 이후 현재까지 총 21 건, 259억 달러 상당의 은행지불보증장을 남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은 불행보증장을 현금화하기 위해 유럽 금융계에서 유통을 추진했으나, 유럽 금융 기관의 재보증 거부, 북한의 낮은 신용도 및 지불 능력 부족으로 유통에 실패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은 유럽에서 보증장 유통에 실패하자 1996년 하반기 이후에는 싱가포르, 홍콩 등 동아시아 금융 시장에서 유통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점진적으로 국내 금융 시장에서 유통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체제 이후 어려운 국내 경제 사정으로 국내의 일부 불건전한 기업인들이 북한의 보증장 유통 사기에 끌려들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 금융 기관의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강조했다(『한겨레』(1998. 5.18)).

L/C를 매입할 국내 은행은 거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내 은행은 북한 은행과의 환거래 계약 체결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차선책으로 ING은행 서울지점 및 제3국을 통해 현재 북한에 영업 기반을 가지고 있는 ING은행 평양지점과 직접환거래망을 연결하는 것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외에 중국 은행으로서는 유일하게 북한의 대성은행과 환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중국 은행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도 효과적이라 할 수 있겠다.<sup>19)</sup>

#### 청산 은행 지정은 한시적으로 적용

정부는 남북한간 교류의 확대를 촉진하고, 또 남북한간에 이미 합의된 사항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청산결제제도의 실시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 차원의 청산결제제도는 IMF 8조(상무 결제 협약 금지)의 의무 사항에 위배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半官半民 차원에서 청산결제제도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20)</sup>

그러나 남북한간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더

라도 청산결제제도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기는 곤란하며, 북한의 금융체제와 대외적 신인도가 개선됨에 따라 환결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는 청산결제 방식을 도입하여 남북한간의 직교역을 정착시키고, 북한의 개혁·개방의 진전에 따라 환결제 방식도 병행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산결제제도 도입시 남한의 청산 은행은 북한의 청산 결제 은행 지정, 업무 수행 제반 여건 및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은행-조선중앙은행, 혹은 한국수출입은행-조선무역은행과 같이 상호 대응되는 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는 청산 결제 관련 업무 처리의 효율성, 정부의 대북한 자금 지원 및 결제 창구의 일원화, 남북협력기금과의 연계성, 과거 사회주의 국가 등 북방 거래 지원 업무의 경험, 고유 업무의 특성 및 지원 업무와의 연계성, IMF 8조 의무 준수 등을 감안하여 적격 은행을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여진다.<sup>21)</sup>

19) 한편, 북한의 경우 환결제 담당 은행이 국가 기관인 점을 감안하여 초기에는 남한의 경우도 이에 대응하는 대외 거래 전담 은행과 환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담당하도록 하고, 어느 정도 환결제체제가 구축된 후 일반 상업은행들도 담당하도록 확대하는 것이 정부의 조정 능력을 유지하면서 민간 차원에서의 금융 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20) 박 전·임원혁·이유수(1998. 6), p. 165 참조.

### 북한 금융 인력 연수 필요

국내 은행의 사무소·지점·합영 은행 형태의 북한 진출은 남한 은행들의 금융 기법과 경험의 전수를 통해 북한 은행들의 금융 서비스 질적 수준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남북한 상호간의 금융체제와 운용에 대한 이해와 동질적 요소를 증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은행들이 금융 중개 기관으로서의 기본적 역할인 결제편의체제 구축, 자금 동원 및 분배, 위험 관리 편의 제공, 기업 경영 평가 등을 갖추기 위해서는 금융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이 필수적인데, 이러한 전문 인력 양성은 북한에 진출하는 국내 은행들이 담당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은행들이 북한에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북한의 은행들에 금융 전문가들을 파견하여 북한 금융 인력을 연수시키는 방안, 북한 진출 은행(사무소·지점·합영 은행)에서 북한 금융 인력에 대해 OJT 방식으로 연수시키는 방안과, 제3국의 국내 은행 현지 법인에서 북한의 금융 인력을 연수시키는 방안, 남한에 북한 금융 인력을 초청하여 연수시키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이 가운데 북한의 은행에 금융 전문

가를 파견하여 연수시키는 방안이 가장 많은 인원에 대해 연수시킬 수 있으나, 단기간 내에 큰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나머지 방안들은 적은 인원에 대해서 OJT 방식의 실무 위주 연수가 이루어 질 것이므로 단기간에 큰 연수 효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수의 분야도 신용장, 송금 등의 환결제 방식, 무역 금융, 국제 금융, 여신 심사, 자금 조달 및 운용, 자산 부채 관리 등 일반적인 금융 분야외에도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킬 수 있는 분야의 연수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초기 단계에서는 많은 금융 인력들에게 일반 금융 분야와 시장경제체제에 대해 이해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북한 은행에 금융 전문가를 파견하여 연수시키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경제체제와 금융 분야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증진된 후에는 이들 북한 연수생 가운데서 일부를 선발하여 북한 진출 국내 은행, 제3국의 국내 은행 현지 법인 등에서 OJT 방식의 연수를 시키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続

21) 남북한의 결제 통화는 독일과 같이 별도의 통화 단위(VE)를 창출하기보다는 국제 기축 통화(兼 달러화)로 하며, 신용 대월의 규모는 출초족·반출 규모의 10% 정도 신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한국개발연구원(1997. 10), 「남북한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금융 부문의 정책 과제」, p. 26 참조).

# 「통일경제」 목차 색인

## (1998. 1~12)

구분	1998년 1월(통권 37호)	2월(통권 38호)	3월(통권 39호)
편집자의 글	· 남북 관계의 새로운 전기 모색을 위하여	· 내실있는 통일 정책을 기대하며	· 한반도 평화 무드 조성을 기대하며
초점	· 새정부의 대북 · 통일 정책 추진 방향	· 미국의 대북 정책: 감시와 설득	· 통일과 외교
특집	<p>&lt;김영삼 정부 5년의 대북 정책 평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의 혼란과 관료 정치 현상</li> <li>· 정책의 일관성 부족과 국내 정치 논리</li> <li>· 국제공조체제의 균열과 대통령의 리더십</li> </ul>	<p>&lt;신정부의 대북 정책 과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계의 시각</li> <li>· 언론계의 시각</li> <li>· 재계의 시각</li> </ul>	<p>&lt;새정부의 통일 분야 주요 국정 과제 세부 추진 방안&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방안</li> <li>· 남북 교류 협력 행정 절차 간소화 방안</li> <li>· 남북 관광 교류 협력 사업 추진 방안</li> <li>· 남북 이산가족 재회 사업 추진 방안</li> </ul>
특별기고	· 북한의 장래에 대한 최근 국내외 전문가들의 평가 분석	· 신정부의 통일 · 외교 · 안보 정책 추진 방향	· IMF시대 김대중 정부의 정책 과제
논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반도 분단과 한국 경제 구조의 왜곡</li> <li>· 4자회담의 과제와 전망</li> </ul>	· IMF시대의 남북한 경제 관계 전망과 대응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MF시대의 안보 통일 외교의 추진 방향</li> <li>· IMF시대의 남북한 유망 교류 협력 산업 분야</li> </ul>
통일다리	· 북한의 산유국 꿈, 가능할 것인가	· 북한의 종교 정책 어떻게 변해왔나?	· 정무원의 작전국: 국가계획위원회
북한경제	· 북한의 경제관리체계(Ⅰ) - 계획화 체계	· 북한의 경제관리체계(Ⅱ) - 공업관리체계	
해외기고	·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고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대 무역의 추이와 특성</li> <li>· 나진 · 선봉지대에서 나타난 최근 변화의 중요성</li> </ul>	· 북한 경제 개혁을 위한 한국과 일본의 역할
체제전환국 연구		· 체제 전환국의 유형과 특성	· 구소련 및 러시아에서의 경제 개혁과 시사점

## 자료

구분	4월(통권 40호)	5월(통권 41호)	6월(통권 42호)
편집자의 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한 쌍방의 노력으로 본격적인 교류·협력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 교류 활성화를 기대하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질적인 경험 활성화 조치가 필요 한 시점</li> </ul>
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 문제와 인내·끈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경회담과 남북 관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화 공존·교류 협력에 힘쓸 때</li> </ul>
특집	<p>&lt;대북 농업 지원 방안&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한 농업 협력의 현주소와 전망</li> <li>· 농업 종자 지원 방안</li> <li>· 비료 지원 방안</li> <li>· 영농 자재 지원 방안</li> </ul>	<p>&lt;정부의 남북 경험 활성화 방안: 평가와 과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경 분리 원칙과 정책의 일관성 유지</li> <li>· 규제 철폐와 정부의 역할</li> <li>· 기업의 자율성 보장과 부작용 해소 방안</li> </ul>	<p>&lt;남북 경험 현장, 무엇이 문제인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북 사업의 경험과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li> <li>· IMF시대, 중소 대북 경험업체들이 설 땅은 없는가</li> <li>· 당장의 이윤보다 가능성에 승부를</li> </ul>
특별기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 방안: 회고와 과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인덕 통일부 장관과의 대담</li> </ul>
논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남북한 환경 변화에 따른 북한의 대남 정책 변화</li> <li>· 한반도의 긴장 구조: 항구적 평화체제의 모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산 가족 재회 사업과 남북 경협 연계 추진 방안</li> <li>· 북한 식량난과 남북한 농업 협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한 분단비용의 추정</li> <li>· 유류 기계 설비의 대북한 이전을 통한 남북 경협</li> </ul>
통일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화하는 북한의 체육 정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화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근로 단체 首長 교체가 갖는 의미</li> </ul>
북한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상업유통관리체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농업관리체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체계</li> </ul>
해외기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정일 공식 취임하다</li> </ul>		
체제전환국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 민영화의 전개와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과 정치 균열의 변화: 독일의 교훈</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자기고</li> <li>· 북한 컴퓨터·정보 산업의 현황과 전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관기</li> <li>· 북경 남북당국대표회담 평가와 전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li> <li>· 1997년도 북한의 대외 무역 동향</li> <li>· 남북 교역 동향</li> </ul>

구분	7월(통권 43호)	8월(통권 44호)	9월(통권 45호)
편집자의 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황소 지원이 남북 화해의 밑거름이 되기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관성있는 경험 정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간 경험 중중화로 상호 신뢰 기반 구축을</li> </ul>
권두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2의 생각</li> </ul>		
포커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근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 방향</li> <li>북한의 잠수정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결과와 전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의 헌법 개정과 권리 구조 개편 분석</li> <li>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배경과 파장</li> </ul>
특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t;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개선 방안&gt;</li> <li>물류 비용 절감 방안</li> <li>기술자 파견 방안</li> <li>중소 대북 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 방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t;정부의 '햇볕 정책(대북 포용 정책)' 을 어떻게 볼 것인가?&gt;</li> <li>&lt;지지론&gt; 햇볕 정책은 최선의 차선책이다</li> <li>&lt;지지론&gt; 새로운 남북 관계의 초석을 놓는 대북 포용 정책</li> <li>&lt;반대론&gt; 위험한 햇볕론</li> <li>&lt;반대론&gt; 북한 정세 인식과 대북 정책(햇볕 정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t;남북 관광 교류 사업을 어떻게 추진 해나갈 것인가?&gt;</li> <li>남북 관광 사업의 방향과 기대 효과</li> <li>북한의 관광 상품 개발 현황과 과제</li> <li>금강산 관광에 대한 수익성 분석과 전망</li> </ul>
특별기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의 정부', 대북 포용 정책의 원칙과 추진 방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결성을 통해본 해방후 민간 통일 운동과 정부의 통일 정책</li> </ul>
논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북한 민족 내부 교역의 인정 방안</li> <li>북한 주민의 노동 의식에 관한 연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의 해운·항만 실태와 남북 협력 방안</li> <li>북한의 전력 실태와 남북 협력 방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일에 따른 북한내 산업 입지 개발 추진 방안</li> <li>북한의 주요 노동 규정과 노무 관리 전략</li> </ul>
통일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의 상류 사회, 그 틀 그리고 혼인</li> </ul>		
북한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외 경제 관계: 최근 북러 경제 관계의 현황과 특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외 경제 관계: 최근 북일 경제 관계의 현황과 특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외 경제 관계: 최근 북중 관계의 현황과 특성</li> </ul>
해외기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김정일 정권의 대외 정책과 대남 정책의 변화</li> </ul>		
체제전환국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폐쇄적 자립 경제에서 개혁·개방 경제로: 미얀마·라오스의 경험을 중심으로</li> </ul>		
경험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7·12 무장 간천 시신 발견 이후 남북 경험 동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강산 유람선 출항 기대 속의 남북 경험 움직인</li> </ul>

## 자료

구분	10월(통권 46호)	11월(통권 47호)	12월(통권 48호)
편집자의 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상에 흔들리지 않는 대북관의 필요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속화될 남북 경험, 남북 관계 개선의 계기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새로운 차원에 접어든 남북 경험</li> </ul>
포커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강산 관광은 실현되어야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주영·김정일 회동의 의의와 남북한 관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시 떠오른 북한 핵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li> </ul>
특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t;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취임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gt;</li> <li>세대 교체와 당·정·군의 관계 변화</li> <li>북한新내각의 경제 관료들</li> <li>정책 노선의 지속? 단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t;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취임 이후, 북한의 대외 정책·관계 변화&gt;</li> <li>북한의 대미 관계 전략</li> <li>북중 관계와 북한 대외 전략의 변화</li> <li>최근 남북한 관계 현황과 대남 정책의 전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t;IMF와 남북 경험&gt;</li> <li>1998년 한반도 주변 정세 평가</li> <li>'정경 분리 원칙'과 정부의 대북 정책</li> <li>IMF의 영향과 기업의 대응</li> </ul>
특별기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족 통합을 보는 새로운 시각과 전략: 경제적 측면에서의 접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경제 관리의 '개선'에 관한 연구</li> </ul>
논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개정 헌법(1998. 9.5)의 경제 조항 변화와 고찰</li> <li>남북한 통일 과정에서 사회 문화적 의의와 전망</li> <li>독일 통일의 통합이론적 접근: 기능주의에서 신기능주의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의 지하 시설 건설과 인공위성 발사후 미국의 대북 정책</li> <li>남북한간 효율적 통신 통합을 위한 분석</li> <li>남북한 어업 협력 방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김일성과 김정일의 모습</li> <li>정치적 요인이 남북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계열 분석: 정경 분리 원칙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li> </ul>
북한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외 경제 관계: 최근 북미 경제 관계의 현황과 특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의 외자 유치 현황과 특성</li> </ul>	
경협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98년 북한의 대남 경협 창구에 대하여: 창구는 여전히 다원화 속에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공적인 대북 사업 추진을 위한 북한 방문 길라잡이</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자기고</li> <li>남북한 관광 협력 추진 방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기고</li> <li>북한의 새로운 핵기지: 사실인가 허구인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자기고</li> <li>국내 은행의對북한 진출 방안</li> </ul>